

# 박 대통령 “공공기관 노사 이면합의 뿌리 뽑아야”

### “노조 등 저항 땀 책임 물을 것”... 당정, 강경 대응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부문 개혁을 두고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라고 원칙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는데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가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 지급, 무상 교육에도 직원 자녀에게 100%에 육박하는 보육비를 지원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노사 간 악성 이면합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강경 대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 간 이면합의로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해 온 공공기관 경영진과 노조를 배임죄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안홍욱·유정인 기자 ahn@kyunghyang.com

# 방만경영 작심 비판한 박 대통령 ‘비정상적 정상화’ 분위기 조성용

### 정책 실패·낙하산 인사 외면 노조 책임만 앞세운다 비판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핵심 기조인 ‘비정상적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보인다. 방만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노조와 간부들의 반발을 기선 제압하고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실 운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나 낙하산 인사는 외면한 채 노조 책임만 앞세우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해왔다. 부처별로 지난 5일 시작된 정부 업무보고에 비정상적 정상화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

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방만경영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만큼 뿌리뽑아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화된 과도 복지혜택이 방만경영의 핵심이고,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이면합의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한 것은 여론에 개혁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식 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배부른 노조’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여론을 등에 업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저항을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책임을 상당 부분 노조에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달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이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에 있다며 강력 반발을 예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채 발생 원인이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과 전 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거론한 것도 이를 의식한 측면이 짙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개혁 방해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혀 철도노조 파업 대응처럼 원칙적·배타적 태도로 대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근책도 내놨다. 노사가 순순히 개혁에 동참해 성과를 내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타협보다 원칙만으로 밀어붙일 경우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낙하산 기관장, 반발하는 노조 달래려 ‘이면합의 퍼주기’

### 기재부 발표로 본 ‘노사 이면합의’ 실태

사측 원활한 취임 위해, 노측 실리 챙기려 합의도 적잖아 카지노 개선 축하금·휴직자 학비 지원 등 ‘과잉복지’ 만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사 간 이면합의에 따른 과도한 복지혜택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면합의가 그만큼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이면합의란 공공기관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세부 내용을 별도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뜻한다.

#### ■ 낙하산 인사가 이면합의 원인

이면합의가 늘어난 데는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주요 공기업에 전문성과 정통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노조를 달래기 위해 이면합의를 한 사례가 많았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가 사장 출근 거부투쟁을 벌이면 사측은 노조에 줄 당근이 필요했다”며 “사측은 원활한 취임을 위해, 노측은 실리를 챙기기 위해 서로 합의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면합의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여론몰이식으로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 이면합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세우지 못했다. 단체협약회의록 전체를 이면합의라며 올린 곳도 있다.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에 실사를 나가 비밀회의록 등을 직접 뒤져보기 전에는 이면합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다. ‘진짜’ 이면합의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공기관들이 9건을 이면합의라고 알리 오며 올렸지만 실제로 이면합의인 지 누락된 회의록을 공시한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면합의는 노사 양측이 비밀스럽게 한 것이라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 ■ 과잉복지는 대부분 이면합의로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공기관이 자진신고한 노사 간 이면합의는 9건이다. 지난해 공시했던 50여건을 포함해도 295

#### 공공기관 과잉 복지 사례

##### 해외 학교 다니는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

→ 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 등

##### 공상 휴직자에게 보수 전액 지급

→ 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광물자원공사 등

##### 돌나·임플란트 치료비, 난임극복 시술비 지급 → 가스공사

#####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 2000만원까지 지원 → 토지주택공사

##### 업무상 사망 시 1억5000만원의 유족 위로금 지급 → 한국전력

개 공공기관 중 60여곳만 이면합의를 공개한 것이다.

이면합의는 단체협약을 맺었을 때 정부 직책을 받게 될 조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대폭 수정했다. 이후 맺어진 단체협약은 두루뭉술해졌고, 대신 이면합의가 크게 늘어났다.

이면합의의 대표적인 문제는 과잉복지다. 강원랜드는 2012년 12월 임금교섭 부속합의서에서 ‘카지노 환경 개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 직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또 직원 1인당 2개 동호회에 한해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3년 1월 맺은 대전 이전 관련 별도 합의에서 ‘직원들의 거주지 확보를 위해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5회 이내에서 대전 출장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 임금협약서에서 ‘2009년 하향 조정돼 들어온 입사자의 임금을 2012년 복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통해 육아휴직자도 야간학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경향신문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003면 종합

# “복리후생비 줄여 부채 해소? 3250년 걸린다”

### 노동계 “침소봉대로 본질 흐려” 총파업 예고… 노·정 대치 격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조를 공기업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한 데 대해 “부채의 본질적 이유는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복리후생비 등을 침소봉대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공동투쟁을 예고해 노·정 간 대치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법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위법적인 정상화대책에 이어 대통령이 나서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

혔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같은 잘못된 정부 사업 전가, 요금 인상 억제 등에 있다”면서 “정부가 1인당 감축키로 한 144만원의 복리후생비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을 해소하려면 325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일부 기관에서 해외파견 근무 때문에 두고 있는 복지 혜택 등을 전체 공공기관의 잘못된 양 몰아가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총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늘린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받는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

진 이면합의 사례들은 부대합의서나 보충협약서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리지 않은 것일 뿐이며 노조나 언론, 결산서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개혁을 거부하지 않으며 지금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정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은 정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7일 ‘305개 전체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각 사업장별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거부키로 하고 정부의 정상화 대책 추진 시기에 맞춰 이르면 상반기 중 총파업 쟁의에 돌입키로 결의할 예정이다.

박철웅 기자 hero@kyunghyang.com

# 朴대통령, 兩大 노총에 “公共 개혁 방해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민주·한국 노총이 최근 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응키로 한 것에 대해 “변화의 길에서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때문인데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 정부와 노조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민노총·한노총 연대에 경고  
“시위 등 방해면 책임 물을 것  
공기업 이면합의 뿌리 뽑아야”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나”  
노조측은 강력 반발, 충돌 예고

대통령은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다”면서 “이들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400조원으로 하루 이차 비용이 200억원이 넘는데 그중 5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 말고도 심지어 이면합의를 통해 시설 확충, 축하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당정 협의를 갖고 '악성 이면 합의' 등에 대해 배임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석들에게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노심초사를 하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골자로 한 '정부 3.0'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처와 기관이 정책에 손

을 놓고 있는 것도 개혁해 나가야 할 일 중 하나”라고 했다. 또 “공무원이 책무를 잇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임무에 서 있을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와 민주당 설현·김현미·전순옥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의 책임을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면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력화 등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기업 부채와 과잉 복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정부의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에 따르면 복리후생을 축소해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

관리 기관 부채 411조7000억원의 0.0364%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개혁을 원한다”며 “근체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기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노정 교섭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공공기관 노조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고 나설 경우 정부와 정면 충돌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 5일 대표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공대위나 연맹에 위임해 대응하기로 했었다. 최재혁·최종석 기자

## 한국일보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A01면 종합

# 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노조 방해 책임 묻겠다”

### 노조 측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인 양 정부가 호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연대, 시위 등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 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외유학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 지급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의 치과 진료비 지원 ▲1인당 100만원의 축하금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공공기관 복지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방만경영의 주된 원인으로 공공기관 노사의 이

면합의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면합의를 놔두고서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한 복지혜택이 담긴 이면합의를 작성한 공공기관에 대해 노조와 경영진을 모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축소나 중단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정상화 방안 자체가 속 빈 강정”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 데도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한국일보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A04면 종합

# 노조 공대위 “일방적 개혁 추진 땀 총력 투쟁”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노조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발언을 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별도로, 이면합의로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면합의가 아니라 정부보고에 올리지 않은 합의일 뿐”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데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를 해소하려면 3,25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우선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일방적 공공개혁이 계속 추진될 경우 ▲일체의 단체교섭 거부 ▲공공기관 노조 경영평가 거부 ▲지방선거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박종익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304

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했다”며 “12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단체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에는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도 예정돼 있다. 공대위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공공노조연맹 등 양대 노총에 소속된 5개 산별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 **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노조 방해 책임 묻겠다”** |

# 노조 조직적 반발에 사실상 선전 포고 “지방선거 득표에 유리” 계산도 깔려

정부가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전문이 짙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개혁을 노조가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노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겠다고 맞섰다. 양 측이 강경대결로 치달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치른 채 공공기관 개혁 실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경영평가 거부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통해 정부가 노조의 어떤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표를 얻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울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철도노조 파업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확인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하자 이번에도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 실무 지휘자인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혁작업을 노조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개혁 드라이브에 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 기관마다 부채 성격 달라 38곳 획일적 대응은 문제 ‘노조 손 보기’ 식 안 돼야

육 박차를 가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정부는 정책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조의 제안을 언제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협조를 구할 부분에는 언제라도 대화에 나서겠지만 경영평가 거부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공기관에 대해 한뫼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기대했던 개혁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별로 부채 성격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방만경영으로만 몰고 간다는 것이다. 전성인 흥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의 파국적 충돌을 피하려면 힘 있는 정부가 먼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공공기관 개혁 방향은 부채감축은 뒷전이고 ‘노조를 손보겠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기업의 과도한 처우만 부각시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것도 합리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국감 때 여야 모두 공공기관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했고, 사전에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쳤다”며 별도 합의기구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성인 교수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조의 제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 정치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사회적 합의구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낼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박대통령 “노조 개혁방해 책임물어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제

“공공기관 노조 연대해  
개혁 저항 움직임 우려”  
야 “불통과 배제의 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가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노조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해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으로 정부의 적자 떠넘기기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의 과잉복지와 노조의 반발을 정조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는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고, 해외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상반기 주요 국정목표인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방만경영의 실상을 적극 공개해, 이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야당과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통과 배제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설훈 위원장과 김현미, 전순옥 의원은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양대 노총은 부당하고 초법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지침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까지 선언하고 있다”며 “확실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억지 대책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 근절을 비롯한 종합적 원인 규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쌍용차 회계조작, 금감원은 도대체 뭐했나”

### 2011년 무혐의 처리 책임론 비등 노조 “회계법인 방패역할 한 셈”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쌍용차 회계가 사실상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추진하면서 과거 쌍용차와 회계법인의 감사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금감원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 감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008년 쌍용차는 18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회

계감사 후 쌍용차의 순손실이 7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안진은 쌍용차가 액티언 등 일부 차종을 단종시킬 계획이어서 기존 자동차 생산설비 가치 중 5000억원 이상을 손실(손상차손)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쌍용차는 회사의 경영난을 들어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노동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원은 이 같은 설비 가치 절하는 과다하며, 따라서 대량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차량이 단종된다 해도 어느 정도는 생산이 지속될 수 있고, 신차가 출시되면 설비 전환이 예상된 만큼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하게 회

계처리됐다는 것이다.

당장 금감원이 책임 공방에 시달리게 됐다. 2011년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이 회계를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금감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쌍용차 노조 등은 “법원에서도 장부 이상을 감지하는데 전문 기관인 금감원이 이에 눈감은 채 회계법인의 방패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법원 판결문을 구해, 법원이 쌍용차의 손상차손과다 계상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내용 검토 후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방송인 김제동씨가 10일 저녁 경기 평택대 90주년기념관에서 객석을 가득 메운 쌍용차 노동자들, 평택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 ‘봄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평택 | 강윤중 기자

# 김제동 “쌍용차, 억울한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 평택서 ‘쌍용차 노동자·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하고 노동자 김밥 팔아 번 돈으로 행사 1600여명 ‘빼곡’

방송인 김제동씨가 10일 저녁 경기 평택대 90주년기념관 무대에 섰다. 쌍용차 노동자와 평택 시민 1600여명이 빼곡히 들어찬 토크콘서트에는 ‘봄날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쌍용차 회계조작 혐의 재판이 끝난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무하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한 심리치

유센터 ‘와락’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더는 반복과 갈등의 굴레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에서 따뜻한 2014년 봄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감독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꽃미남’이라고 소개하자 김씨는 “오늘 출연료 안 받는다. 유일한 출연료가 박수인

데, 이따위 박수를...”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얘기를 시작했다. 김씨는 “사실 (정리하고 무효 판결이 나온) 오늘은 좀 축하해야 할 자리 아니냐”며 “억울한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이 법의 기본 목표다. 억울한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안과 밖,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고 연대하면서 웃으면서 밀리 가보자”며 “(정리하고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 가는데 미리 박수를 보

낸다”고 덧붙였다. 시종일관 웃음꽃이 터졌지만, 김씨의 말에서는 이전의 날카로운 풍자보다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콘서트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김밥을 지난해 11월부터 출근시간 공장 앞에서 팔아 번 돈으로 추진됐다. 쌍용차 노조는 “처음 김밥을 팔아 공장 출입문에 썼을 때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지만 따뜻하게 김밥을 사주는 손길을 접할 수 있었다”면서 “온정에 보답하고자 토크콘서트를 마

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트위터에 “이란과 쌍용을 잊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라”라는 글을 남기며 쌍용차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콘서트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의 권리를 막는다면 함께 싸워주겠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따뜻한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다.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hero@kyunghyang.com

## 공지영씨 '의자놀이' 11만부 팔아... 인세 3억8000만원 쌍용차 해고자 후원

작가 공지영씨(사진)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시민, 출판사 휴머니스트가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2012년 출판한 <의자놀이>의 총 기부액이 2월 현재 3억7236만 35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휴머니스트는 "2013년 12월31일까지 판매분에 대한 공지영씨의 인세 1128만 8400원, 출판사 판매 수익금 1881만4000원 중 세금·홍보비를 공제한 2119만8450



원 5563만1350원을 4차 기부금으로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후원을 위해 개설한 '의자놀이' 계좌 모금액 3443만 2900원(1월26일 현재)을 합

총 기부금은 1차 1억5364만9430원(2012년 9월), 2차 9219만30원(2012년 10월), 3차 7089만2690원(2012년 12월)을 합해 3억7236만3500원이다.

쌍용차 노동자 2646명이 해고된 이후 77일간의 파업과정과 22명의 죽음을 다룬 르포 작품 <의자놀이>는 2월 현재 11만부가 판매됐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 매일경제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A15면 기업

## 또 불거진 한국GM·쌍용車 노사갈등

# GM군산공장 군살빼기 실사 유럽·호주 이어 감산 수순?



자코비 사장

한국GM 사무직 희망퇴직 조치에 대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노사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쉐보레 철수와 호주 홀덴 공장 폐쇄를 주도했던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국외업무 담당 사장이 이번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GM 생산물량 조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이 발표한 희망퇴직 조치는 미국 GM 본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간주한 뒤 "회사 측 강요행위가 발각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대법원의 통상 임금 판결,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 파업과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희망퇴직 조치는 노조 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생산물량을 감축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임원부터 퇴직하라"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 측은 강경투쟁 방침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GM 본사 스테판 자코비 국외업무 담당 사장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10일 한국GM에 따르면 미국 GM 본사 자코비 사장이 14

한국GM 자동차 생산대수 (단위=만대)



### 해외담당 사장 14일 방한 勞와 회동 노조, 희망퇴직 거부 강경투쟁 선언

일 한국을 방문해 군산공장 등 생산시설을 실사한 뒤 한국GM 경영진, 노조 측과 연쇄 회동을 할 예정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번 스테판 자코비 사장 방한은 GM 본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사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진은 물론이고 노조 측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코비 사장은 지난해 8월에 임명된 이후 한국이 포함된 아시

아·태평양지역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국외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유럽시장 쉐보레 철수, 호주 홀덴공장 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자코비 사장이 이번엔 한국을 방문하면 통상임금 대응전략과 군산공장에 대한 생산물량 조정 등 글로벌 본사 차원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GM 본사는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단계적

으로 철수하고, 호주에서도 2017년 말까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종환 한국GM 노조위원장은 "GM 본사의 글로벌 공장 구조조정과 생산물량 감축으로 한국지사 조합원들이 고용 불안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한국에 남겠다는 막연한 말보다는 명확하게 투자조치를 밝히고 생산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GM 본사의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시장에서 철수하는 2015년까지는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군산공장 가동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인력 감축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GM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회사가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오는 28일까지 사무직 직원과 일부 생산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채수환 기자

## 인도 대주주 마힌드라 “쌍용車 정리해고 무효판결 우려”

### 한국 투자계획에 영향 미칠지 촉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효판결과 검찰의 회계장부 재수사 방침에 대해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마힌드라그룹은 서울고법의 정리해고 무효판결 소식을 보고받은 뒤 “쌍용차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

했다. 이와 관련 이유일 쌍용차 대표는 “상고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잘 설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힌드라그룹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직접 나서 “2017년까지 쌍용차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쌍용차의 정리해고 법정공방에 따라 한국 투자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쌍용차는 서울고법 판결문을 곧 마힌드라그룹에 원문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며 법리적 판단을 거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용차가 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고,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마힌드라그룹의 한국 투자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고심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정리해고 노동자 153명에 대한 복직 계획은 현재로서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과 조치가 재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마힌드라 본사와 논의해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한겨레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X14면 지방

# “여수산단 기중기 해고노동자 복직을”

## 노조 “조합 만들면서 3명 부당해고” 삭발투쟁...노동위에 구제신청 내기로 원청 GS칼텍스 “사실무근 주장”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설과 유지 보수 등 작업을 맡는 기중기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지회장 진수희)는 10일 “여수산단 일대 15개 기중기 임대사의 조종사 100여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3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전남동부기중기노조는 “지난해 10월 노조를 설립한 뒤 지에스칼텍스의 작업 물량을 가장 많이 수주하는 임대사 대한중기에 소속된 노동자 정아무개(39)씨 등 3명이 업무능력 부

족과 작업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이는 해고를 하기 위한 구실일 뿐 실제로는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가 단행된 만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른 시일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2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3~4월에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지에스칼텍스 앞에서 ‘대한중기 노조탄압 분쇄와 해고자 복직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진 지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삭발하는 등 투쟁 결의를 다졌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계절적으로 수요가 들쭉날쭉한 탓에 임대사들이 비수기에는 장비를 팔아버리고 일자리를 없애버리는가 하면 성수기에는 휴일이나 야간을 불문하고 작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며 “이

런 약조건을 해소하려고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기중기 노동자한테도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인정 △8시간 노동 △일요 휴무 시행 △고용안정 대책 등을 촉구했다.

조대의 노조 조직부장은 “대한중기는 지에스칼텍스의 물량을 대부분 수주하는 여수산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임대사”라며 “애초 사원 22명 중 17명이 노조에 가입했다가 해고 위협이 거세지면서 6명만 노조에 남을 정도로 파괴 공작이 거세다”고 호소했다.

특히 노조는 가입한 노조원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과 가족들을 협박하는 수법의 노조 파괴 배후로 원청업체인 지에스칼텍스를 겨냥했다. 이를 두고 지에스칼텍스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협력업체의 노사 관계에 개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안관욱 기자 okahn@hani.co.kr



19대 국회에 발의된 근로기준법(정리해고 요건 강화) 주요 개정안

현행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방식·기준에 대해 통보·협의	기타
김성태 의원안	범위 축소: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등	서면통지·협의 확대: 해고 시기·인원 등	-
이종훈 의원안	현행	예시: 근로시간 단축, 전환배치, 여유자산 매각 등	서면통지·협의 확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시기·인원 등	해고통지시 우선 재고용 기재
홍영표 의원안	현행	예시: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	서면통지·협의 확대: 해고자 선정 방법, 해고 시기·인원, 해고수당 계산 방법 등	경영상 해고요건을 단행에 기재
심상정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생산성 향상 위한 구조조정 제외	예시: 자산매각, 업무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홍영표 의원안 동일+협의 의무 조건 포함	대규모 해고는 노동부 승인

# 정리해고요건 강화 법안 '쌍용차 판결' 효과 볼까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판결 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2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법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간편한 인력 구조조정의 디딤돌로 삼아온 경영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9대 국회 들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새누리당에선 김성태·이종훈·최봉홍·강은희 의원이, 야당에선 홍영표·정청래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

로시간 단축과 전환배치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업무조정(김성태·심상정), 희망퇴직(김성태), 자산매각(김성태·심상정·이종훈)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구체적 노력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못 박을지도 의원들간 입장차가 있다. 쌍용차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2005~2007년의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은 (2009년) 정리해고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해고 회피 조처로 평가하기 어렵다. 정리해고 이후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도 해고 회피 노력의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 방식과 기준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협의하도록 한 규정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고 시기·인원 정도만 서면통지하자는 여당안과 해고자 선정 방법, 해고수당 계산법 등까지 협의의 대상을 확대해 서면통지하자는 야당안이 부당하지만,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는 한뜻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승인으로 전환(심상정)하거나, 신고 위반 때 벌칙을 주자는(이종훈) 주장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정리해고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을 넓히려는 취지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은 "개정안을 2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한진중공업·쌍용차 등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두루 형성돼 있다. 야당은 김성태 의원안만 통과시켜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발 물러선 이종훈 의원 발의안을 밀고 있는 눈치다.

한국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집단해고를 위한 고용보호 입법의 유연성이 1998년 4위, 2003년 3위, 2008년 3위, 2013년 3위로 높았다. 정리해고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뜻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 25일 또 경고파업?

# 정신 못차린 코레일노조

철도노조가 오는 25일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단 하루 동안의 파업이지만, 국민을 볼모로 삼아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했던 지난해 철도파업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에 나서는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방만 경영으로 코레일이 17조원의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노사가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집단 파업을 들먹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10일 파업에 참여할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오는 16일까지 확정할 후 17-22일 총력투쟁 기간을 거쳐 25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8797명의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490

여 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198명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15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교섭과 경고파업을 통해 징계를 철회시키고 2013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경고파업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말 파업 종료 이후 코레일이 116억원 조합비 가압류와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량 징계 등 불법파업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이어가자 이를 저지할 필요성을 느낀 노조가 파업을 내세워 코레일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은 "역대 최장 기간 불법파업을 진행한 노조가 또다시 파업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7개 발의 2월국회서 처리 공감대 형성

### '경영상 필요' 내세우는 기업 해고 회피 노력 구체화될 듯

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이 가운데 여당의 김성태·이종훈 의원안과 야당의 홍영표·심상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 열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고 방식·기준에 대한 노동자와 통보·협의 △일정규모 해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등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 등이 모호하고 세부규정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산매각,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우선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근

## 서울신문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012면 종합

### 박기성 노동경제학회회장 취임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11일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인적 자본 및 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랭 소사이아티 회원으로 선정됐다.

# “검찰, 노동부에 불기소 송치 압력” 유성기업 노조 파괴 수사 ‘봐주기’

은수미·장하나 의원·금속노조, 재수사 촉구

고용노동부가 ‘노조 파괴’ 프로그램 가동했다가 적발된 유성기업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금속노조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유성기업 수사 결과 요약’ 자료를 보면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면서 “사용자의 노조 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쥐어준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의 제안서에 따라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및 온건 합리적인 제2

노조 출범’ 계획을 짜 실행했고, 회사와 신설 노조 간부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했으며, 노사관계전략회의를 통해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기소를 건의했으나 검찰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금속노조와 의원들은 “100여개의 전략회의 문건을 통해 각 시기마다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 실행에 옮겼음이 쉽게 확인된다”면서 “증거 부족이 아니라 검찰이 사용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유성기업 재수사

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장 의원은 “대전고검은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수사해야 한다”면서 “재수사 과정에서도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에 노동전담부를 두거나 노동부가 독립적인 수사과 공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2011년 5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용역 폭력이 행사된 후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과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충북 옥천에서 120일 넘게 광고탑에 올라고 공농성을 하고 있다.

박철웅 기자 hero@kyunghyang.com

## 22m 고공서 받아든 ‘유성기업 불기소’

울림마당

저는 2013년 10월 경부고속도 옥천톨게이트 인근 광고탑에 올랐습니다. 유성기업의 불법 행위 처벌을 요구하려는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강풍이 광고탑(22m)을 흔들어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모질게 이어온 투쟁은 벌써 120일이 넘었습니다.

새해도 여기서 맞았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151일간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 굴뚝에서 시위할 때 이어 두번째로 고공에서 설을 지냈네요. 고향으로 떠나는 긴 발걸음을 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오셔서 유성지회에 헌납해주세요”라며 올해는 반드시 투쟁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지 못한 동지들은 광고탑 밑에서 함께하며, 소중한 떡국을 올려줬습니다. 22m를 오르는 사이 식어버렸지만 떡국의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저는 떡국과 새해 일출을 보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떡국을 맛보고, 가족과 함께 새해 일출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맞이할 설 명절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사법기관의 올바른 법집행을 요구하며, 광고탑에 올랐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온다는 입춘, 하늘과 맞닿은 광고탑에 배달된 것은 봄소식 대신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통지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수사 때 유성기업 사측이 제2노조 설립 지배개입과 노조간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

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부정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유성기업의 불법적 노동자 탄압을 정당화해주었고, 사측이 고용한 용역강패의 살인적 폭력마저 묵인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 송치지휘를 건의하였으나, 검찰지휘에 의거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독점 기소권과 지휘권 남용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검찰의 자본 편들기 불기소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확대 적용하고, 또 다시 유성기업 노동자와 같은 노동탄압 현실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친자본주의가 아닌 노동자, 서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속에 나라 경제도, 국민 행복도 함께할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민주적 법치주의 국가가 실현되어,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쫓값이 치러지는 그날 옥천 광고탑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깃발은 휘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작은 동지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고공에서 늦은 세배를 올립니다. 노동자 홍종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올림



# 특수고용직에 파업권 허하라

## 세상읽기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정책위원 트 아줌마들이 모조리 일손을 놓을 때에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조직해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3권'이라 불리는 이 권리들은, 어느 하나만 제한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불가분의 것이다. 하물며 노동자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인 파업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일부 언론에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비정형 근로자 보호 방안 정책보고서'가 소개됐다. 한국노총에도 버림받은 노사정위가 작년 12월 만든 보고서, 이게 왜 이제야 언론 보도로 나왔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 보고서는 화물트럭·덤프·레미콘·퀵서비스·대리운전·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 보고서는 유독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만은 보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일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이라는 한마디 외에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니,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인가. 그럼 '그 일부' 때문에 나머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가 몽땅 제한되는 것은 정당한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존재는 전혀 '특수'하지 않다. 정부와 자본은 이들이 '노동자'와 '자영업'의 경계선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업종에서 특수고용 형태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도록 자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현재 200만명에 육박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들 다수도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와 택배기사들을 보자. 이들은 물건을 배달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어떠한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전화기를 설치해 배달 주문을 받아, 대기 중인 기사들에게 '오더'만 내리면 된다. 배달 요금 전체를 업체가 챙긴 후, 거기에 붙는 몇%의 수수료만 떼어주면 된다.

배달 주문량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업체 입장에서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다. 업체 홍보나 주문량 따오기조차 기사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도록 해서 떠넘긴다. 온갖 재주는 기사들이 부리는데, 돈은 모조리 업체가 챙겨간다. 주문량이 떨어져 업체 문을 닫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경영자들이 져야 할 책임이나 부담을 모조리 기사들이 대신 지기 때문이다. 주문량이 감소하면 업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배달 건수가 떨어져 자동으로 임금이 삭감된다. 자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쉬운 장사인가!

이처럼 자본가들이 져야 할 경영 위험이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특수고용'이란 고용형태다. 그런데 정부는 10년 넘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정위는 파업권은 도저히 못 주겠으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으로 만족하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인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 “노사정위 사실상 정치 국회 ‘전략대화’ 나서야”

## 심상정 비교섭단체대표 발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주도로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했다. 또 노동계에는 '사회책임 노동운동'을 제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공공부문 개혁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치 상태"라며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2월 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국회 내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국회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그는 철도파업 사례를 들며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노조가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 검토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이 이념의 언어라는 편견이야말로 편견이다.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윤리,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인권 등 노동을 정규교육으로 다루며 △정리해고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폐지, 정개특위 상설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30%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복원, 복수공천제 금지 등 정치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 ‘한진중 시위’ 김진숙,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 ‘신고된 거리행진’ 위법성 여부 쟁점 변호인-검찰,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은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의 관을 지키며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 25일 동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한 김진숙(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11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10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도위원 등 6명의 국민

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무작위로 뽑힌 후보 239명 가운데 법정에 출석한 98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확정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어떻게 유무죄를 증명할 것인지와 사건 배경 등을 배심원들한테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경찰과 노조가 각각 촬영한 지난해 1월30일 상황을 대형 화면으로 배심원들한테 보여줬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1월30일 부산역에서 집회를 마친 800여명이 부산 영도구 구민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최씨의 주검이 든 관을 앞세우고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이

막으면서 양쪽이 충돌하는 장면 등을 2시간여 동안 시청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들의 말을 들었다.

변호인은 경찰에 미리 신고했던 합법적 거리행진을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서 참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영도조선소 서문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전에 신고한 거리행진이라 하더라도 주검이 든 관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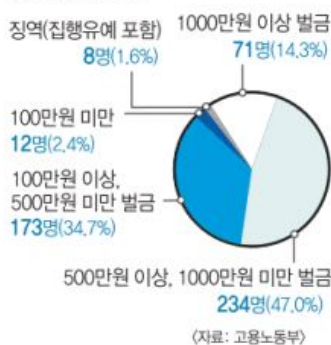
11일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증인으로 내세운 경찰과 숨진 최씨의 부인, 피고인 6명을 대표한 정홍형(49)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이 신문을 받는다. 이어 검사의 최종변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 악덕 임금체불 98%가 벌금형

작년 명단공개 사업주 498명  
단 8명만이 집유 포함 징역형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 고통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 498명 가운데 8명(1.6%)이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490명(98.4%)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공개 사업주 3명 중 1명은 자신이 체불한 임금 총액의 6분의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금액만 벌금으로 선고받았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가 오히려 늘게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불임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고용부는 10월 2010~2012년 악덕 체불로 인해 명단 공개 통지를 받은 사업주 가운데 확정 판결을 받은 전원의 형량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뿐 아니라 신용 제재를 받은 사업주 787

명, 구속수사를 받은 사업주 52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피고인 34명에 대한 확정 형량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은 극히 드물게 선고됐고, 벌금형 역시 체불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한 법원 형량 분석이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말 체불임금으로 인한 두 번째 명단 공개 대상자 56명을 분석했을 때 사업주당 평균 체불액은 6818만원이고,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12명이었다. 체불액을 범죄 액수로 보고 다른 범죄 형량과 비교해 보면 법원이 체불 사업주에게 유독 관대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사기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 횡령 및 배임죄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 기본 형량으로 매겨졌다. 범죄 금액이 1억~5억원 일 때 사기죄 기본 형량은 징역 1~4년, 횡령 및 배임죄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늘어난다.

체불 사업주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명단 공개 이전 3년 동안 체불 임금으로 인해 2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고, 최근 1년 동안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정도 금액을 체불하면 임금 체불 피해자수가 10여명이 넘기 일쑤이고, 피해자들의 가계는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다가 파산에 이르기 도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관련기사 4·5면

# 10만곳 1조 체불에도 구속 年10명 명단공개·신용제재 정책 ‘무용지물’

## 상습 악덕 사업주에게도 관대한 법

발주 대금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사업주 A씨가 이 돈으로 밀린 임금을 주는 대신 자신의 도박 빚을 청산했다. 32명의 임금 1억여원을 때먹은 A씨는 가족을 이사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연락 두절 상태로 만든 뒤 도주했다. 6개월 만에 검문에 걸려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구속 상태에서 받은 재판이 끝나자 A씨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 3개월 정도 추가 복역한 뒤 곧 풀려났다.

원청 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33명의 2개월치 월급 지급을 미루던 사업주 B씨는 3개월 치 월급 지급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원청 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변명과 다르게 B씨는 이미 1억 6000만원의 대금을 모두 받아둔 상태로, 이 돈만으로 총 7600만원인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도주하면서 돈을 친척 등에게 빼돌리거나 써 버린 B씨는 결국 불잡혀 구속 기소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반면 임금을 떼인 직원들은 돈을 되찾으려고 B씨의 친척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민사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지 못하는 상태다.

A씨와 B씨처럼 구속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하는 사업주처럼 아주 상습적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10만 8043개 사업장이 26만 7000여명의 임금 1조 1930억원어치를 체불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를 받는 데 비해 임금 체불로 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매년 10명 안팎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게도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정책은 임금 체불을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고용부가 지난 4년 동안 임금 체불로 인한 구속 피의자 52명 중 확정 판결을 받은 34명의 최종 형량을 사상 최초로 분석했더니 ▲실형 11명(32.3%) ▲집행유예 18명(53.0%) ▲벌금형 4명(11.8%) ▲선고유예 1명(2.9%)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

4년간 체불 판결 34명 중 실형 11명, 나머지 집유·벌금 형량도 대부분 1년 미만

사업주 수감 생활 마친 뒤엔 근로자와 성실한 재판 ‘외면’ “체불, 민사로만 접근은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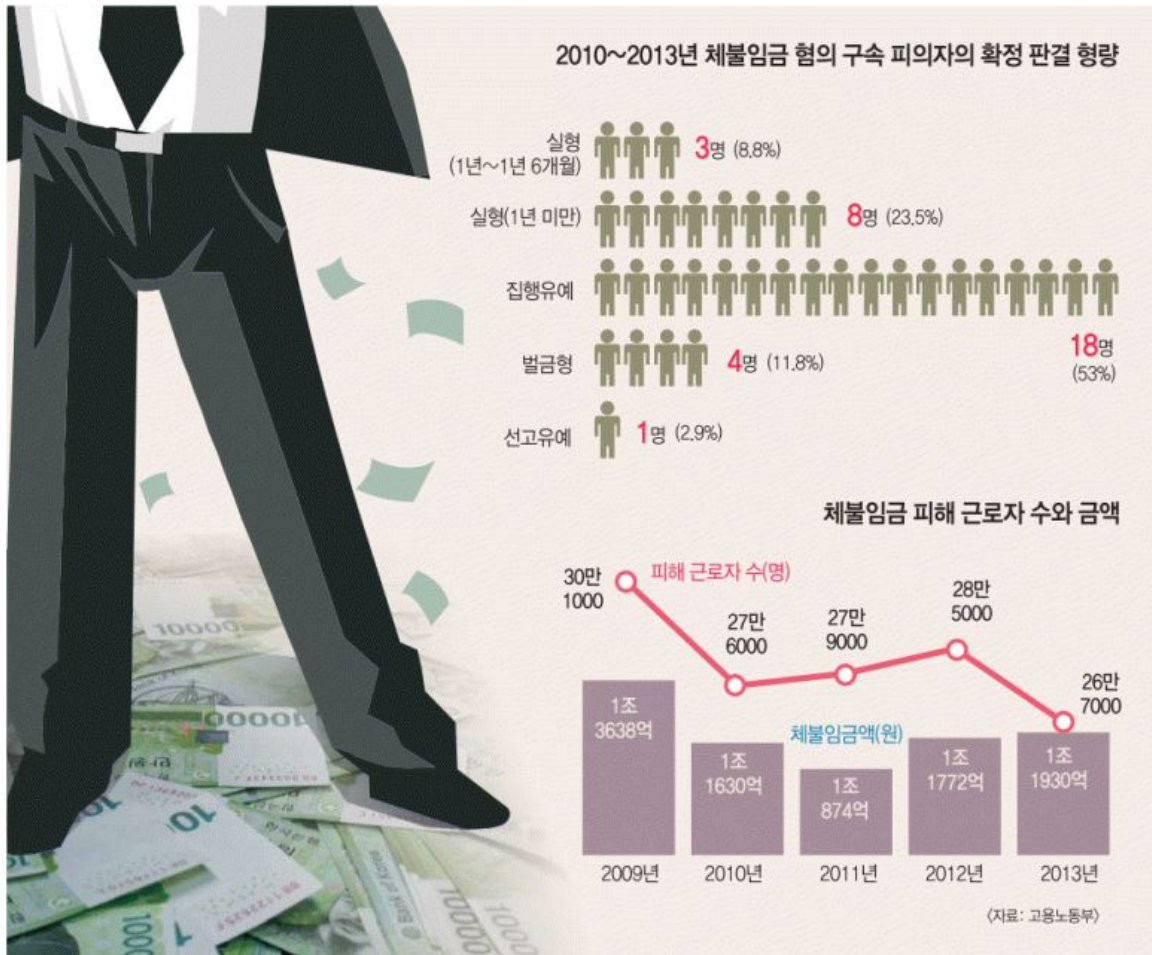
은 피고인 11명의 형량을 보면 1년 미만 형을 받은 이가 8명이고 나머지 3명도 1년 6개월 미만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불 피해자들은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형 확정으로 단기 수감 생활을 이미 마친 피의자가 민사 재판에 성실한 태도를 보일 여지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 2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형사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는 ‘신용 제재’를 받은 787명 중에서도 징역(집행유예 포함)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는 9명(1.1%)에 불과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이 80명(10.2%), 500만~1000만원 벌금형이 300명(38.1%), 100만~500만원

벌금형이 383명(48.7%),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15명(1.9%)이었다. 연 2000만원 체불이 신용 제재 기준의 하한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신용 제재 인원의 절반은 체불액의 4분의1만 벌금으로 내면 처벌이 끝나는 셈이다. 한 노무사는 “법원은 체불 임금뿐 아니라 부당 해고 같은 노무 사건을 사업주와 근로자 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일이 많고 이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른 범죄에 비해 수위가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체불이 비교적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현상을 보면 이 문제를 개인 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꼭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체불 임금 구제 방안’에 대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사업주들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 현실 때문에 법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수천만원 임금체불도 수백만원 벌금 그쳐

### 상습 체불 부르는 낮은 형량 사례

수천만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기소되더라도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면서 최고 10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는 사업주까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상습 체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498명 중 385명(77.3%)이 2~3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91명(18.3%)은 4~5회, 18명(3.6%)은 6~7회, 4명(0.8%)은 8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누범들이라고 10일 집계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도록 신용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 정책에 따라 체불액이 감소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책을 기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미국의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악화 여파로 피지 못하게 체불을 하게 된 선량한 사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지도 줄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3년치 체불 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명단

### 정부의 체임방지정책 '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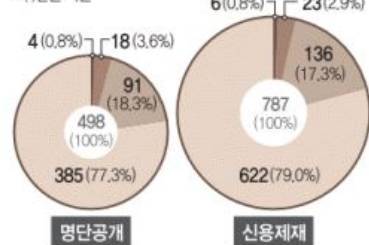
### 10회 이상 유죄받는 업주도

### 불황 여파 선의 체불 업주만 '오명'

#### 체불 사업주 유죄 확정 횟수별 구분 (단위: 명)

■ 8회 이상 ■ 6~7회 ■ 4~5회 ■ 2~3회

※ (1)인은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공개 조치를 단행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임금 체불로 인해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공개됐다.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치 임금 체불 총액이 2000만~3000만원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대신 신용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신용 제재 조치

는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및 3년치 체불 금액을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사업주 신용도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일을 말한다.

명단 공개 등의 고용부 조치는 체불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은 당초 498명이었지만 조치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과 소명에 나서 208명이 배제되고 290명의 명단만 공개됐다. 마찬가지로 신용 제재 대상 인원 역시 당초 787명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명한 이들을 제외하고 505명만 최종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임금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라면서 "근로자 임금을 안 주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도 있지만 사재를 털어 월급을 주다가 망하는 사업주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워 불가피하게 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8월부터 퇴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한번만 신고해도 낙인... 뺏에 빠진 근로자들

'반의사 불법죄 체계'가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가 모시던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적반하장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임금을 못 받을 줄 알아라"라고 공세를 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불임금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는 것"이라면 "임금 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처벌받게 하면 월급 안준다”  
체불 사업주가 적반하장  
“중재·조정 시스템 만들어야”**

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지만 회사는 개의치 않았고 이씨는 항의하지 않았다. 이씨는 퇴사한 뒤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 봤다. 1년 반 동안 계산된 금액은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퇴사하기 전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챙겨서 나온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했고, 고용노동청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처럼 월급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하면 임금체불 문제는 일부 부실 사업장뿐만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월급 또는

수당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이를 찾기 위한 구제 조치는 쉽지 않다.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성이 강한 업계에서는 퇴직 후 체불임금을 청구했을 때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한 퇴직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을 받게 됐지만, 인터뷰를 요청한 10일 “더 이상 화제에 오르거나 소문이 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고사했다.

체불 사업주가 자진해서 임금을 마련하도록 근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는 취지에서 2006년 도입한

금형 분야 근로자로 일하던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유독 자주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회상했다. 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통합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장근로 내용이 자주 바뀌니 계약서도 자주 바뀌었다. 때때로 이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2시에 퇴근하기도 했다. 1주일 동안 연장근로가 12시간

〈도산기업 근로자 생활자금〉

## 3개월치 임금보전 ‘체당금’제도 악용 만연

서에서 실시된 '체불제로 서비스 팀' 제도다. 이 팀은 노무사가 나서 체불 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정, 해결을 전담하도록 했지만 노무 인력으로 체불 이외의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체됐다. 이어 2012년에는 변호사들이 전면으로 나섰지만 노동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고용부는 올해부터 변호사와 노무사가 한 팀을 이루는 '권리구제지원팀'을 구성해 체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일부 업주 3개월 고의 체불  
채임 피해 방지 취지 퇴색**

을 체불한 뒤 폐업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습,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목포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와 근로자 모두 '3개월'을 거론하는 이유는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산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이 최종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서

생계비 대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일부러 고의 체불을 염두에 두고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체당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체불임금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좌초된 적도 있다. 2010년 시범 운영되다가 이듬해 43개 관

“저희 업계는 워낙 체불이 만연해 있으니까요 월급이 한 달 안 나온다고 바로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끼리는 3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이 안 나오면 그만두고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건설업계 근로자)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퇴직 전 못받은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사업자 바뀌기 전 연락처·주소 확보를

## 김창현 노무사의 체불임금 Q&A

퇴직금을 곧 입금한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갸름무소식이다. 다니던 직장 동료가 야근수당을 받았다고 함박웃음을 짓는데,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라며 회사가 입을 짝 닦아 버렸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임금을 안 주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 갑자기 대표자 명의를 바꿔 버렸다. 이때 과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 체불임금의 범위를 노무법인 로맥의 김창현(사진) 노무사가 안내한다.

- ▶ 퇴직 후 2주가 지나도 못받은 퇴직금은 체불임금에 포함되나.
  - 퇴직금은 넓은 의미에서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매달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과 퇴직 시 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중간정산되는 퇴직금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또 근로관계 당사자가 약정한 각종 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



은 비록 근로자가 임금일 전에 퇴직했다더라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지급청구를 촉구할 수 있다.

- ▶ 근로 중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퇴직 이전에 근로를 계속하는 중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몇 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을 때 체불임금 청구를 하는 게 적당인가.
  - 회사의 경영 상황, 회사의 최고의 사결정권자의 체불임금 변제 의지, 근로자 당사자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다. 월급이 한 달만 밀렸어도 당장 회사가 부도 위기라면 임금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임금 청구를 하는 편이 좋다. 역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

불이 났더라도 회사의 경영이 나아지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체불임금을 당장 청구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근로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 ▶ 노무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장점은 적법하게 산정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임금이 존재함에도 법적인 지식이 없어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노무사는 또한 노동청의 행정절차 및 사건처리 방향을 알고 있고 입증 자료 채집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근로관계 당사자들끼리 마주하기 꺼릴 때에도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하다. 단점은 수임료와 같은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 ▶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 명의를 바꾸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업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는 실제로 그 사업이 타인에게 모두 양도되었거나 또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바꾼 경우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대처법이 다른데 최우선적으로, 특히 개인사업주라면 이전 사업자와 이후 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변제 책임이 어떤 사업자에게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리 녹록지 않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내일신문

# 전공노, 부위원장 선거 부정 논란

<전국공무원노조>

## 선관위원장 날인 없는 투표용지 ... 위원장 선거 이어 물의, 지도부 공백 우려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위원장 선거에 이어 부위원장 선거에서도 부정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장 날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가 무효처리됐다.

전공노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제7대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투표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부 지부에서 선거인단 입회 전에 투표함이 개봉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전공노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제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7대 부위원장 선거 후보에는 △기호 1번 정보훈 △기호 2번 이해준 △기호 3번 전호일 △기호 4번 김성진 등 네 명이 등록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자체 실수임을 인정했다"며 "본디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10일 오후 4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향후 부위원장 재선거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중집

에는 임원, 본부장 등 노조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다.

한편, 전공노는 지난달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 이어 부위원장 선거에서도 물의가 빚어지면서 지도부 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전공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김중남 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로 끝이다.

전공노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7대 임원선거 투표를 실시했다.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다. 제7대 임원선거에는 정현재(위원장), 김주업(사무처장) 후보가 1번 선본으로, 이충재(위원장), 김성광(사무처장) 후보가 2번 선본으로 각각 출

마했다.

개표결과 각 선본의 득표 수는 간발의 차에 불과했다. 정현재 선본(3만4669)의 득표 수가 이충재(3만4659) 선본보다 10표 많았다. 정현재 선본을 놓고 1월 27~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충재 선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충재 선본 측은 △일부지역에서 90%이상 불표가 나오고 99%의 투표율을 기록한 점과 △휴직자는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 “회사 눈치 때문에...” 아빠들의 두려운 육아휴직

## 정부 육아휴직 독려하지만 현장선 여전히 ‘그림의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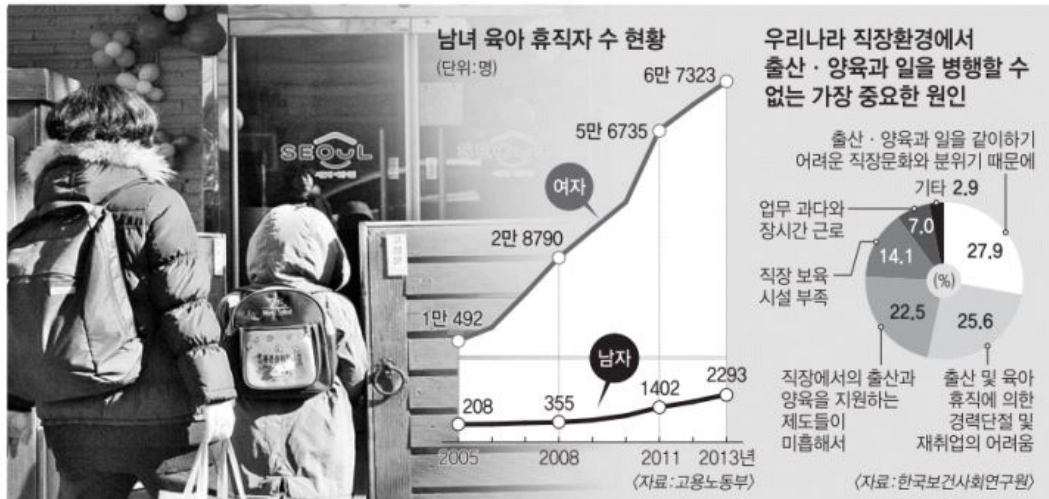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3)씨는 1년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상사로부터 “미친 것 아니냐”는 꾸중을 들었다. 상사는 김씨에게 “육아휴직을 한 사람을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터라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던 김씨는 고심 끝에 1년 육아휴직을 했다. 하지만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탓이다. 김씨는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5년 208명에서 지난해 229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회사들 노는 것으로 인식  
대기업 다니던 40대 가장  
복직 후 정리해고 ‘뒤통수’

대부분 생계 책임지는 남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낮아  
양육비 등 감당 어려워 부담

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6만 7323명)의 3.4%에 그쳤다. 남성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회사 눈치’를 꼽는다. 휴직 후 대체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연차를 쓰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에서 ‘육아휴직’ 말을 꺼낼 엄두조차 못 낸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

제 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22.6%),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17.3%)가 뒤를 이었다. 2011년 8월 육아휴직을 했던 박진현(43)씨는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눈 밖에 날까 봐 두려워 육아

휴직을 꺼린다”면서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월급쟁이들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발

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휴직자가 받게 되는 첫 달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최대 150만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낮은 탓에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남성 근로자의 급여가 높은 편”이라며 “대부분 남자들이 생계를 책임지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축하해 주는 문화를 직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육아휴직 할당제 등 강제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여성이 미래다... 경력단절 막아 국가경쟁력 높이자 |

# 재취업 현장 가보니... "워킹맘도 잘해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성의 노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지난 10여년간 50% 내외에서 정체,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여성 노동에 대한 근본대책 대신 고용률의 단순확대에 그칠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여성인 미래다... 경력단절 막아 국가경쟁력 높이자'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지난 4일 경북 영천시 도남동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 대하인프라. 작업장에는 30, 40대 여성들이 자동차 기어박스에 들어가는 콘솔을 조립 및 포장하느라 바쁜 손놀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완성된 부품은 일본닛산자동차의 미국공장으로 전량 수출된다. 이 업체 근로자 47명 중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다 재취업한 여성은 15명이다. 모두 생산직이지만 전업이 전혀 없는 주 5일 근무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상용직(정규직)이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비교적 좋은 조건에 속한다. 또 노동강도도 높지 않고, 추위 및 더위와도 무관한 근무환경이어서 경력단절여성이 제2의 경제활동을 시작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여성, 특히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적극 지원하는 여성친화, 가족친화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여성근로자의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유연근무와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대하인프라에서 반년 정도 근무 중인 김월미(37)씨는 초교 5학년, 고교 1학년 자녀 둘을 뒀다. 결혼 후 일을 접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식품회사에 잠깐 취업했으나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으로 몇 달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주위의 소개로 알게된 경북새일지원본부 직업설계사의 주선으로 대하인프라에서 근무하게 된 김씨는 "탄력시간제 근무여서 퇴근시간이 빨라 집안살림에 애로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일의 성격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워킹맘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업체는 이직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하인프라 관리팀 박동효(46) 차장은 "경력단절여성 등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돼야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며 "이런 면을 감안해 우리 회사에서는 출퇴근시간을 여성들에 맞게 조정하고, 자녀가 아프다거나 하는 비상상황에서 여성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쓰도록 항상 5%의 여유인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을 그만 두었다가 뒤늦게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들이 최근 영천의 여성친화인증기업인 대하인프라에서 자동차부품인 콘솔을 조립한 후 포장하고 있다.

탄력시간제... 출퇴근시간 융통성  
인력 여유... 연차 사용 눈치 안봐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 한 손에

급여 불만 "가족친화형기업 보다  
고임금·고강도 직장 찾게돼...  
경력단절 해결 최저임금 인상부터"

이날만 해도 각각 둘째기와 유치원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두 명이 자녀문제로 결근했다. 박차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집도 맞벌이를 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당시는 지금처럼 방과후 학교 같은 것도 없었고 여성근로자들이 집안일 때문에 하루 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던 시대라 경력단절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여성 및 가족친화기업 여성근로자들도 불만이 없진 않았다. 근무시간에 비례한 빈약한 임금 탓이다. 이 회사의 경우 기본급이 시급으로 책정되고 여기에 210%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더해

지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불과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은 상여금 포함 125만원 정도다. 이 곳에서 일하는 최은혜(48)씨는 "결혼 후 일을 접었다 아이들이 중교 교진학할 즈음 일을 다시 갖게 됐는데, 서비스업이나 여타 생산업체는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몸이 힘들고 가정생활도 엉망이었다"며 "이 회사는 근무여건은 좋지만 한 달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어 어렵다"고 했다.

"170만원 정도는 손에 쥐어야 할 맛이 날 것 같다"는 임정숙(51)씨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가족친화기업 보다는 오랜 시간 고되게 일해도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일·가정양립 지원은 우선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최저임금 체계를 끌어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글 쓰는 순서

<상>경력단절 재취업 현장 가보니

<중>경력단절여성 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하>전문가 지상대담

# 기혼여성, 미혼보다 직접고용비율 낮아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저학력일수록 시간제로 일해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직접고용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간접고용비율은 미혼여성보다 3배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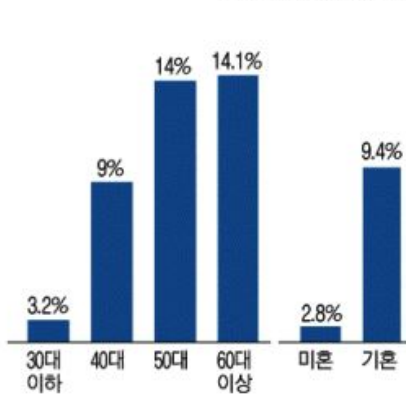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의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직접고용비율은 97.2%로 기혼여성 90.6%보다 6.6%p 높았다. 간접고용비율은 미혼여성의 경우 2.8%, 기혼여성은 9.4%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접고용비율은 떨어졌다. 30대이하 여성의 간접고용비율은 3.2%에 불과했지만, 60세이상 여성의 경우 14.1%로 4배이상 높았다. 여정연은 2006년부터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변화 등을 추적조사해오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만 19세이상-만 64세 이하 여성가구원 1만 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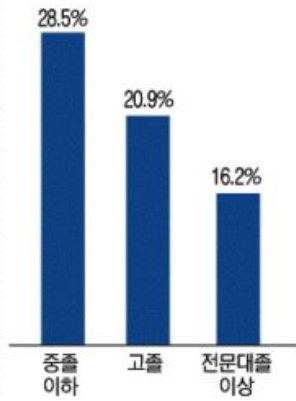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이 시간제로 일

여성임금근로자의 간접고용 비중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임금근로자의 학력별 시간제 근무 비중



하는 비율이 28.5%로 가장 많았다.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시간제 비중은 16.2%로 제일 낮았다. 하지만 시간제를 희망하는 여성의 비중은 정반대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이 38.8%로 가장 높은 반면, 중졸 이하 여성이 시간제를 원하는 경우는 21.4%로 제일 낮았다.

게다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10명중 6명은 시간제 근무를 원

하지 않았다. 전일제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여성이 64.4%였으며, 경력단절 취약연령으로 꼽히는 40~50대 역시 2명중 1명꼴로 전일제를 선호했다. 전일제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60세 이상이 8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이하 73.1%, 50대 52.4%, 40대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경향신문

# “직장 내 괴롭힘, 정신건강권 침해 위험수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유럽 국가들은 형벌로 규제”  
국내엔 실태 조사 전무...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지난해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ㄱ씨(28)는 ‘신입이 90도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차려’를 당했다. 술자리에서 폭탄주 제조는 언제나 ㄱ씨 몫으로, 선배 술잔을 비게 했다 가는 눈총이 돌아왔다. ㄱ씨는 화장실에서 물레 운 적이 여러 번이다. ㄱ씨의 선배들도 업무 실적 때문에 줄서서 부장에게 ‘조인트’를 끼이거나 뺨을 맞는 게 다반사였다.

4년차 직장인 ㄴ씨(28)는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상사에게 머리를 맞는다. 욕설과 반말도 일상이

다. 매번 수치스럽지만 ㄴ씨는 항의해본 적이 없다. 그는 “사표 쓰겠다는 결심만 수차례 했지만, 사정상 바로 그만두기 어려워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 만드는법(희망법)은 지난 8일 ‘새로운 시선-작업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히 노동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신건강권 침해로 바라보는 관점과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

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왕따, 성희롱 외에도 상사의 ‘타당성 없는 비난’ ‘소리를 지르거나 창피를 주는 일’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희망법 공동현 변호사(34)는 “노동자들은 괴롭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로 여기고 개인이 극복할 과제로 인식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입법화돼 형벌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정의해 규제해 왔다. 프랑스는 2002년 직장내 정신적 침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고 직업 장애를

위험하는 반복적인 정신적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사업주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도 포함시키고, 무의식으로 끼친 피해 행위까지 규제해 1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조사나 노동자의 정신건강권과 연관시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과제’에 관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류문호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강사(32)는 “근로자 정신건강 침해는 법이 규율하는 독립적인 대상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만큼 정부 차원의 실증조사나 학술연구들이 이뤄져야

입법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희망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이 2013년 11월 발간한 ‘자본의노동자통제전략대응연구보고서’를 보면 쟁의 노동자에게만 성문을 강요하거나, 노조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조치와 협박 등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한정예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포럼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성대 교수·경제학

# 民間기업 나서야 女性고용 해결된다

20대에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여성(女性)의 경제활동은 3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육아 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난 40대 이후에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없어 많은 여성 인재를 재취업을 포기하는 전형적인 후진적 구조다. L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인데, 미국은 0.1%에 불과하다.

## 여성의 경력단절 손실은 GDP 4.9%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은 기대가 크다. 사회 구조의 특성상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임신 및 출산, 자녀의 영유아기, 초·중·고 시기에 맞춰 모성 보호, 보육 및 돌봄, 재취업 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급여를 100% 지원하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을 택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들이 보인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10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63%가 상용직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나, 국가재정이나 고용보험 재정을 활용해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여러 방안이 실효성 있는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취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민간(民間)기업들은 자체적인 인력 양성에는 소홀하고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는 열심이어서 몇 년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에서 양성된 인력을 대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 일종의 '이적비'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을 정도다. 여성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은 당장의 손익계산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제고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다. 여성 채용 및 경력 유지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정부의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통해서 여성 채용이나 경력 유지를 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되고 스펙(SPEC)이나 학벌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인적자원이 평가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 열린 노동시장과 능력평가 시스템 필요

여성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은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미 정규직으로 진입한 남성들의 기득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고용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으로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많은 여성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또한 결혼과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학벌이나 근무경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들은 생계형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NCS), 이에 기반한 학습 모듈 개발, 국가역량체계(NQF)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 현상 수료를 반영한 교육훈련을 거쳐 제대로 된 일자리

## 한겨레

2014년 02월 11일 화요일 033면 오피니언

# '또 하나의 약속'이 1000만 영화인 이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 가장 면밀한 탐사가 이루어진 것은 1997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 제작팀이 영화촬영을 위해 탐사를 했을 때였다. 영화 초반에 무인탐사기가 침몰한 배안의 구석구석을 훑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가장 진보한 탐사 장면이었다.

영화가 현실을 선도하는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취약자 수용 시설 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2011년 '도가니법'의 통과를 이끌어냈고,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국으로 돌아났던 제2의 용의자 수사를 15년 만에 재개시켜 범죄인 인도 신청으로 이어졌고, 영화 <부러진 화살>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럴 법한 영화가 하나 더 나타났다. 그것이 <또 하나의 약속>이다. 우선 이 영화의 폭발적 현실성은 회피하기 어렵다. 수년간의 투쟁 끝에 황유미씨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산재인정을 하였지만 2011년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산업재해제도가 고용주 과실의 입증책임과 보상액수의 예측 가능성을 맞바꾸자는 노사 간의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둔 전세계적인 합의를 위반한 폭거였다(<한겨레> 2011년 7월12일치). 게다가 황유미씨의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산재인정을 거부하다가 2012~2013년 법원에 의해 거부처분이 취소되자,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이면 황유미씨의 항소심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시 항소를 하는 악질적인 반노동자적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영화가 호명하는 현실 자체가 지뢰밭이다.

또 이 영화는 보편적이다. 나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이전 영화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1980년대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가장 직설적으로 묘사했고 지금은 여러 정당파로 나뉜 과거의 학생운동가들과 그들을 옆에서 가슴 졸이며 바라보았던 동료들도

두를 울릴 영화라고 평하면서 그 보편성에 힘입어 1000만 영화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또 하나의 약속>도 산업재해제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극영화다. 1000만 노동자가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번 영화가 입증책임을 외국의 선진적인 수준으로 전환시킨 '삼성백혈병 법'이 대법원 판례로 이어지지 않아도 좋다. 제발 근로복지공단의 퇴행적인 행정에는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현실 세계에서의 힘이 꺾일 것 같은 징조가 보인다. 영화가 좌석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보통 현실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면 언론은 영화 속의 주인공에 대한 인터뷰, 사실과 영화의 '같은 점/다른 점'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가 몇 자 적고자 한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에 매우 충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황유미씨의 발병과 사망에 대한 삼성 쪽의 반응 부분이 그러하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 삼성전자 원무과의 반응이나 "4000 주고 다시 4000 주겠다"고 해놓고는 수술비가 필요할 때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소액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모두 사실을 재구성한 것이다.

게다가 좌석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부러진 화살>이 245개, <남영동 1985>가 308개를 받은 상영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씨지브이(CGV)·롯데·메가박스 3사가 90% 이상의 스크린 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영화감독 김태윤이 고맙다. 이제 우리는 집회나 시위에 나가지 않고도 기부금을 내지 않아도 영화 한 편을 봄으로써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영관 독점, 근로복지공단, 대기업 독점 문제 모두에 대해 한꺼번에 조용히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이여, 여러분이 작업장에서 또는 과로로 쓰러졌을 때를 생각하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다. 무서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이 영화는 꼭 봐 달라.



##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돌풍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지난 주말 극장가에 의미 있는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영화계는 ‘또 하나의 약속’이 적은 스크린에도 불구하고 첫 주 인상적인 성과를 거둬에 따라 상영관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뜬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고 황유미씨의 사연을 밀그림 삼은 이 영화는 기획 단계부터 제작과 상영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또 하나의 약속’의 개봉(6일) 스크린 수는 전국 159개로 많은 편이 아니었다. 제작사나 배급사 등에겐 기대

**백혈병 피해 노동자 실화 다뤄  
외압 논란 등 스크린 수 적은 데 반해  
좌석점유율 48%·첫 주 17만 관객  
상영관 수 확대될지 관심 높아져**

밖이었다. 외압 논란이 일었다. “부당하다”는 제작사의 항변이 있었고 “시장 논리를 따랐을 뿐”이라는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의 반박이 이어졌다. 개봉 첫 주 17만 5,837명(9일 기준·영화진흥위원회 집계)이 관람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과 충무로 코미디 ‘수상한 그녀’가 ‘쌍끌이 흥행’을 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다. 한 극장 관계자는 “예상 밖 흥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약속’의 선전은 여러 수치가 방증한다. 이 영화의 9일 좌석점유율은 48.1%였다. 대형 흥행작 ‘겨울왕국’ (71.5%)과 ‘수상한 그녀’ (52.3%)를 이

어 3위를 기록했다.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일로부터 4일 연속 일일 흥행순위 5위에 올랐다.

상영횟수에 비하면 관객도 많다. 9일 ‘또 하나의 약속’의 전국 상영횟수는 774회였다. 6일 개봉해 9일 흥행 순위 4위(6만7,946명)를 차지한 할리우드 영화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 (1,461회)의 절반 수준이다. 9일 ‘또 다른 약속’을 찾은 관객은 5만4,831명이었다.

상영 스크린 수도 꾸준히 늘고 추세다. 7일 169개를 기록했고 9일엔 190개 스크린에서 상영됐다. “관객이 많이 찾지 않을 영화라 스크린을 많이 배정하지 않았다”는 일부 극장의 주장이 명분을 잃은 셈이다.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 중 롯데시네마의 스크린 배정이 유독 적었다. 전국 7개에 불과했다. 극장 광고의 큰 손인 삼성전자를 의식한 결과라는 의혹이 따랐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상업영화를 자처하지만 다양성 영화(예술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을 가리키는 통칭)라고 봤기에 7개 스크린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개봉 영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스크린 수가 결정되기에 ‘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 스크린 수 확대는 예단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크린 수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약속’ 측은 “여전히 비정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영화의 배급사인 올(OAL)의 김이정 이사는 “한 스크린에서 하루 1, 2회 상영되는 정도이고 상영 시간도 주로 오전에 배치돼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 월급 60만원·하루 밥값 4천원...아프리카 예술단 '노예노동'

파이나(27·여)는 2009년 11월 짐바브웨에서 한국에 왔다. 조국의 조각예술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 들어가면서 꿈은 "악몽이 됐다". 파이나는 이 박물관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8시간씩 조각을 하면서 월급으로 65만원을 받았다. 법정 최저임금은 한달에 126만9154원이었다. '왜 65만원만 주느냐'고 항의할 때마다 박물관 관리자는 "소용없다"고 했다. "이사장이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이 박물관의 이사장은 핵심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59)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다.

파이나처럼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조각·공연 등의 일을 해온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12명이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모였다. 전체 노동자는 24명이었지만, 8명은 귀국했고 4명은 도망갔다고 한다. 이들은 노예처럼 일해왔다고 폭로했다. 최저임금, 적정 식비, 휴가 등 어느 것 하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켜진 게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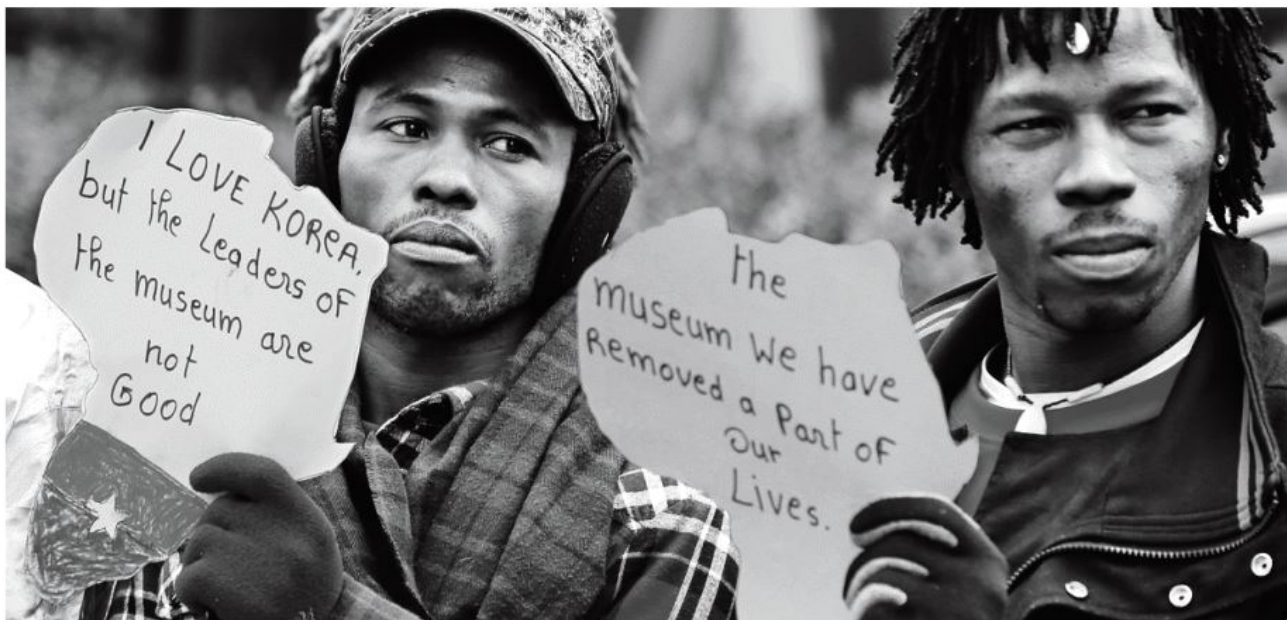
북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엠마누엘(34)은 2012년부터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전통공연장에서 춤을 취했다. 엠마누엘의 월급은 60만원이었다. 법정 최저임금으론 105만5893원을 받아야 했다. 그는 "나는 우리나라의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춤꾼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남은 돈이 전혀 없다.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엠마누엘 등 부르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노동자들 수당도 못받으채 공연 강요받아 여권 압수도... "숙소엔 쥐 들끓어" "인간답게 대우하라" 집단 반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이사장 박물관 "최저임금기준 맞게 계약"

키나파소 출신 공연노동자 8명은 9일 계약이 만료됐다. 예술홍행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27일 까지 출국해야 한다.

이들은 쥐가 옷을 갹아먹는 곳에서 자고 상한 쌀로 밥을 해 먹었다. 부르키나파소 출신 라자크(26)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과 계약할 때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갖춰진 훌륭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와 보니 숙소 유리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쥐가 들끓었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숙소의 환관 유리도 깨져 있다고 한다. 기숙사에는 난방과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방도 있었다. 식대는 하루 4000원이었다. 2012년 7월까지는 2500원이었다. 파이나는 "한국에서 도저히 세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었다. 항의하자 밥을 직접 해 먹으라며 쌀을 줬지만 상한 쌀이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그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버텼다"고 말했다.

부르키나파소 출신 4명이 이런 환경을 견디다 못해 무단이탈하자 박물관 측은 남은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기도 했다. '우리의 권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공연 노동자와 짐바브웨 조각가 등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라며 노동자들이 반발해도 소용없었다. 하루 3회 공연이라는 계약 사항도 전혀 지켜지지 않아 하루 4번, 많게는 6번까지 공연했다고 한다. 연장수당이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역시 전혀 받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사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통악기 둔둔과 발라폰을 두드렸다. 아프리카 대륙 모양을 본떠 만든 손팻말에는 영어로 '한국을 사랑하지만 박물관 이사장은 나쁘다' '우

리는 자유'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인간답게 대우하라"며 어눌한 한국말로 구호도 외쳤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사무총장은 개인적 해명 대신, 박상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장 명의의 해명 자료를 냈다. 박 관장은 자료에서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들의 월 급여는 110만원이다. 1일 3회, 1회 공연시간은 40분에 불과하다"고 밝

혔다. 그러나 "숙소는 세채 중 구옥(오래된 집) 한채의 환경이 열악했다. 이주노동자가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생겨, 교육지책으로 여권을 일괄 보관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박 관장은 "홍문종 의원은 바른 의정활동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사무총장은 2010년 8월 이 박물관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 작년 세수 8조5000억 덜 걷혔다

경기침체 탓 법인세 2조·증권거래세 6000억 줄어  
종합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로 2조3000억 늘어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대규모 세입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쓰지 않고 남겨둔 예산(불용액)도 사상 최대 수준인 18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2013 회계연도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2년 국세 수입 203조원보다도 1조1000억원 적은 수치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추경 당시 세입을 6조원 감액하면서 이 정도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수입 실적, 증권거래세 실적 등이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2년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줄어든 43조9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 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은 21조9000

억원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준 반면 개인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늘어난 것이다. 덜 걷힌 세수는 국채 발행, 추경, 불용액 확대 등의 방식으로 메우게 된다. 지난해 대규모 불용액 역시 정부가 이례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씹씹이를 줄이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일반회계 10조5000억원, 특별회계 7조6000억원 등이다. 2008~2012년 평균 불용액 5조5500억원의 3배를 넘는다. 전출금 등 회계·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분야에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거나 예산 계획이 애초 잘못 수립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불용 내역을 보면 교육부 1조원, 농어촌구조개선 3조4000억원, 교통시설 1조4000억원 등 내수 부양과 직결된 부처의 사업 예산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의 91.9%만 집행됐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216조5000억원)는 보수적으로 작성됐다”며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고 대외여건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입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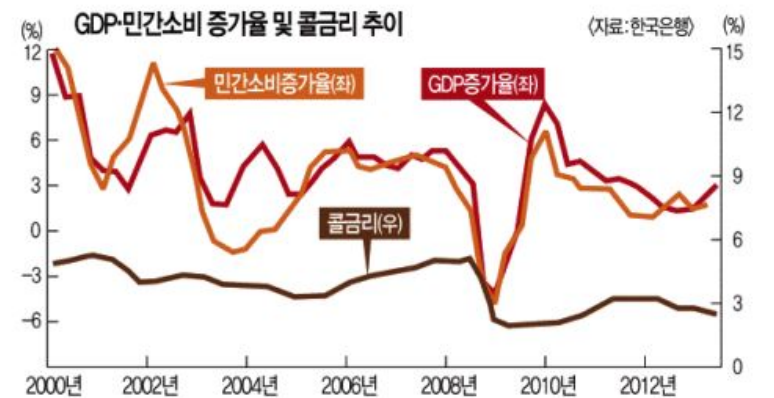
## 국민일보

# 미래소득 불안 탓 갈수록 지갑 닫는다

민간소비 증가율, 금융위기 이후 GDP 증가율 밀돌아  
한은 “인구고령화 대비한 고용 안전망 확보 등 시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을 계속 밀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았다. 즉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가계가 소비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 배병호 차장 등 3명은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 여부를 추정하기 위해 시간할인인자를 분석했다. 시간할인인자는 미래 소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에 대한 가중치다. 0~1 범위에서 1에 가까울수록 가계는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할인인자는 1990~99년 0.982에서 2000~

2013년 0.99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대적 위험기피도도 0.005에서 0.252로 늘었다. 위험기피도가 커질수록 미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 소비를 더 많이 줄이게 된다. 배 차장은 “시간할인인자는 2004년 신용카드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시간할인인자 상승은 가계의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소비 감소를 유발했고 궁극적으로 총생산 및 고용 감소를 유발해 거시경제에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가계가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경향이 커진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 부담 증대,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 및 소득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이 꼽힌다. 특히 은퇴 고령층의 주소득원인 국



민연금 등의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도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2011년 기준)이 42.1%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57.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안정적 소득원 부재, 연금고갈 가능성이 중장년층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 지연 현상이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을 완화시키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